

○ OECD는 한국이 "오염배출부과금 등 경제유인적 규제수단의 효율이 너무 낮아 행태변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환경 수준은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보다 다소 뒤떨어져 있으며,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에너지 가격 조정과 오염배출허용기준을 높이는 등 환경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4월 3일 한국의 회원국 가입을 위해 우리나라 환경정책성과를 심사평가한 결과에 대한 요약보고서와 우리나라 정부가 앞으로 이행해야 할 환경정책 분야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그간 한국정부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법 체계를 정비·보완하고 환경관련 투자를 국내총생산(GDP)의 1.5%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오염배출부과금 등 경제유인적 규제수단의 효율이 너무 낮아 행태변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환경정책결정권한의 지방이양이 미흡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환경기준을 어기는 일이 많으며 시민단체나 비정부단체(NGO)에 대한 환경정보 제공이 모자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OECD는 ▲ 현행 환경정책의 일관된 이행 ▲ 환경 인프라를 바람직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의 지속 ▲ 환경기준 및 오염배출허용한도의 점진적 강화 ▲ 경제유인적 환경규제수단의 효과성 제고 ▲ 지방정부의 환경적 기능 수행 능력 강화 ▲ 중소기업의

환경관리기준 설정과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 ▲ 국민과 시민단체에 대한 환경정보 제공의 활성화 및 생산·소비활동이 미치는 보건·환경적 영향에 관한 홍보 강화 등을 권고했다.

정부는 지난 95년 11월 OECD 가입에 앞서 환경성 평가를 OECD 환경국에 요청했으며 OECD는 지난해 우리나라에 평가단을 보내 우리 정부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환경성을 평가했다.

OECD 28개의 회원국 및 유럽연합 대표들은 4월 2일부터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환경부 정진승 환경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하고 외무부,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6개 부처 관계관으로 구성된 우리 정부 대표단을 참석시킨 가운데 평가회의를 가졌으며, 보고서 본문은 통계자료의 검증과 문안조정을 거쳐 5월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평가회의에서 스웨덴 등 북유럽 회원국들은 한국은 앞으로 OECD 회원국으로서 기후변화협약 상 선진국이 지는 의무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구체적인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라고 촉구했다.

## 수질오염물질 하루평균 6천439톤

지난해 전국 수질오염물질 발생량이 하루 6천4백39톤으로 지난 90년의 4천9백1t에 비해 무려 31.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영장(국제규격 : 50m×25m×2m) 2개를 가득 채우고도 넘치는 양으로, 이를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 1ppm의 물로 정화하려면 팔당호(저수량 2.4억t)정도 크기의 호수 25개의 물을 모두 쏟아부어야 한다.

4월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수질오염물질 하루 평균 발생량(BOD 기준)은 지난 90년 4천9백1t에서 △ 91년 5천49t △ 92년 5천1백47t △ 93년 5천2백60t △ 94년 5천6백28t △ 95년 6천1백7t △ 96년 6천4백39t이었다.

이는 산업·축산시설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것으로 산업체의 경우, 90년 1만3천5백4곳에서 지난해 2만8천12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소·돼지 등 가축은 같은 기간중 6백65만4천두에서 9천7백51만두로 46.5% 증가했다.

또 팔당 등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 숙박·음식점은 6년동안 2천5백25개소에서 3배에 가까운 6천9백54개소로 증가했으며 아파트 등 주거시설은 1천6백29가구에서 8천1백59가구로 5배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94년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특별대책지역의 경우 30%, 자연보전권역 38%가 준농림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오염원이 대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수원 수질은 한강수계 팔당지점의 경우, 지난 90년 1.0ppm에서 92년 1.1ppm, 94년 1.2ppm, 95년 1.3ppm, 지난해 1.4ppm으로 매년 악화되고 있다.

또 낙동강수계는 90년 3.0ppm, 92년 3.3ppm, 94년 4.6ppm, 95년 5.1ppm, 지난해 4.8ppm으로 3급수로 떨어졌으며, 영산강수계도 90년 1.2ppm에서 92년 2.1ppm, 94년 1.9ppm, 95년 2.6ppm, 지난해 2.6ppm으로 나빠졌다.

특히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낙동강 및 영산강의 중·하류 지역의 경우 갈수기 때는 3급수를 초과하는 실정이다.

## 21세기형 '생태도시' 본격 조성

녹지공간이 대폭 확충되고 공원, 자연관찰원, 학교정원등에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도시'가 본격 조성된다.

4월 8일 환경부에 따르면 21세기형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전국 74개 도시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에 따라 도시환경이 우수한 도시 5~6개를 생태도시 조성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대상 도시에 대해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 추진현황 등을 토대로 도시별 구조 및 기능분석과 함께 공원, 녹지, 하천, 호소, 대기 및 수질오염, 폐기물 발생현황 등 도시별 환경현황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환경부는 이같은 기초조사를 통해 전국의 도시를 ▲복합, 공업, 도농통합, 주거도시 ▲대, 중, 소도시 ▲신, 구도시 등으로 분류해 이 가운데 대표도시 5~6개소를 선정, 빠르면 올해안에 시범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시범대상 지역에는 환경친화적 도로 및 교통체계가 도입되며 야생 동·식물 서식공간 조성 등 도시자연생태계의 기능회복 대책과 함께 폐기물 재활용 및 순환이용 시스템이 마련된다.

또 생태도시 조성작업에는 도로 등에서 환경오염물질을 흡수·정화하는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 '환경정화수'조성과 공단지역이나 기타 오염지역의 '환경보전림' 조성, 가스의 폭발 유출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에 환경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단녹지'조성 등도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생태도시 조성 시범사업에 이어 오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주요도시중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대상 지역을 10여개 정도 추가, 선정하고 3단계가 시작되는 2011년 이후에는 전국 도시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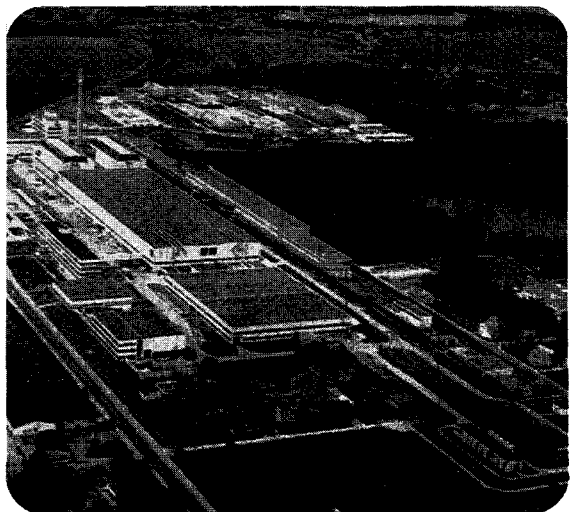
환경부는 이같은 생태도시 조성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되 정부도 예산 및 기술 지원을 맡기로 했다.

## 전국 공단 산림복원사업 본격화

공해가 극심해 황폐화된 전국 공단지역주변의 산림복원사업이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산림청은 4월 8일 공단 등 공해가 심해 주변의 산림이 사라지다시피 한 지역에 공해물질에 대한 저항력이 높은 내공해수와 대기오염물질 흡수·정화능력이 뛰어난 정화수를 심어 연차적으로 산림을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임목육종연구소는 이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공해지역인 울산과 여천공단주변에서 살아남은 해송,



※ 녹지공간이 대폭 확충되고 공원, 자연관찰원, 학교정원등에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도시'가 본격 조성된다.

때죽나무, 산벚나무중에서 형질이 우수한 나무를 선발, 육성해 작년과 올봄에 각각 2개소씩 모두 4개소의 4.8ha(1만4천4백평)면적에 7천3백40그루를 심어 황폐화된 산림을 일부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임목육종연구소는 울산과 여천외의 다른 공단들과 기타 공해지역의 산림도 복원하기 위해 가중나무, 참중나무, 굴참나무, 사스레피나무, 광나무 등의 내공해수와 포플러, 오동나무, 양버즘나무 등과 같은 정화수를 육성, 조립키로 했다.

연구소는 한편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흡수, 제거하기 위해 중금속 흡수유전자를 포플러에 삽입, 포플러류의 중금속 흡수·제거능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공단 및 도시의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오존 등을 잘 흡수, 제거하는 나무도 유전자조작방법으로 육성중이라고 연구소측은 밝혔다.



▲ 환경부는 폐기물예치금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 92년 반환율은 1.9%에 불과했으나 5년만에 15배나 상승해 제도가 정착된 것으로 평가했다.

#### ◇ 대기오염에 강한 수종

▲ 상록수 : 가시나무, 종가시나무, 졸가시나무, 사철나무, 가이스카향나무, 호랑가시나무, 녹나무, 후박나무, 후피향나무, 광나무, 동백나무, 사스레피나무, 진달래

▲ 활엽수 : 은행나무, 참느릅나무, 백합나무, 가중나무, 벽오동, 졸참나무, 버즘나무, 아카시아나무, 떡갈나무, 무궁화, 개나리, 병꽃나무

◇ 대기오염물질 흡수능력이 뛰어난 수종

▲ 상록수 : 사철나무, 칠죽

▲ 활엽수 : 은행나무, 참느릅나무, 백합나무, 가중나무, 벽오동, 멸구슬나무, 아카시아나무, 무궁화, 개나리, 병꽃나무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에 미리 부과했다가 회수 실적에 따라 되돌려 주는 폐기물예치금 반환율이 지난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4월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폐기물예치금 반환실적을 집계한 결과 생산자에게 부과된 3백40억원 가운데 29.3%인 99억7천만원이 반환됐다.

이같은 예치금반환율은 지난 95년 13.7%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진 것이며 94년 8.6%, 93년 7.8%에 비해서는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환경부는 폐기물예치금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 92년 반환율은 1.9%에 불과했으나 5년만에 15배나 상승해 제도가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폐기물예치금 반환율이 높아진 것은 지난 95년 8.7%에 지나지 않던 금속강통과 페트병 등 각종 용기류에 대한 예치금 반환율이 지난해는 31.9%로 크게 높아졌으며 타이어 제품 반환율도 21%에서 32.2%로 상승한 때문이다.

환경부는 금속강통 등 용기류는 지난 95년부터 사업자들이 공동 회수 및 처리시설을 만들어 운영해온 때문에 회수량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제품 생산이 많은 페트병과 여전히 반환율이 5.6%에 머물고 있는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공동 회수, 처리 방식을 도입해 재활용률을 높일 계획이 다.

## 한반도 원시림 16%에 불과

한반도 전체 면적 가운데 산림이 절반을 넘고 있으나 원시림이 우거진 자연림 지역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월 10일 환경부가 공개한 기상 위성(NOAA-14)이 촬영한 한반도 사진에 따르면 산림지역은 전체 면적의 5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외선 파장대를 통한 녹색식물의 분광대를 이용해

한반도의 녹지도를 분석한 위성 사진에서 녹지식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도시지역은 한반도 전역 가운데 1.8%로 나타났으며 농경지 비율은 25.5%였다.

또 과수원이나 갈대밭 등 녹지가 비교적 많이 분포하나 산림으로 볼 수 없는 완충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18.1%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반도 전체의 절반이 넘는 산림지역 가운데 원시림 또는 자연식생에 가까운 지역(녹지도 8등급)은 16.3%, 다층의 식물사회를 형성하는 자연림 지역(9등급)은 0.4%, 식물생육이 가장 활발한 극상림 지역(10등급)은 0.01%에 불과해 대부분 조림지역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 볼 때 남한 지역은 도시지역 비율이 2.75%로 북한의 1.15%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산림지역은 북한이 59.9%로 남한의 47.3%보다 높았다.

도시지역 가운데 녹지의 분포가 많은 곳은 대구·인천·대전·광주·부산·서울 순이었으며 산림이 많은 곳은 강원·전북·경북·제주·전남·경남·경기·충북·충남 순이었다.

## 주요 도시 대기 중금속 오염 심화

우리나라 주요 공업도시의 대기중 중금속 오염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4월 11일 환경부가 밝힌 최근 3년간 주요 도시별 중금속 오염도에 따르면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대기중 납, 크롬, 망간, 철, 니켈 등 주요 중금속 오염치가 지난 95년보다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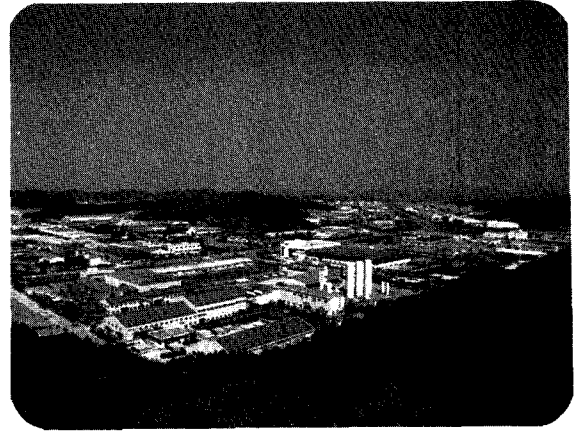
납 오염도는 지난 94년과 95년  $0.24\mu\text{g}/\text{m}^3$ 에 머물다가 지난해에는  $0.27\mu\text{g}/\text{m}^3$ 로 높아졌으며 크롬 오염도도 94년  $0.0187\mu\text{g}/\text{m}^3$ 에서 지난해  $0.0319\mu\text{g}/\text{m}^3$ 로 2배 가까이 뛰었다.

철 오염도 역시 94년에는  $1.7198\mu\text{g}/\text{m}^3$ 에서 95년  $1.9264\mu\text{g}/\text{m}^3$ 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2.2654\mu\text{g}/\text{m}^3$ 로 2년만에 2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의 카드뮴 오염도는 지난 95년  $0.0073\mu\text{g}/\text{m}^3$ 에서 지난해  $0.0168\mu\text{g}/\text{m}^3$ 로 크게 높아졌고 크롬 오염도도 95년  $0.0083\mu\text{g}/\text{m}^3$ 에서 지난해  $0.0122\mu\text{g}/\text{m}^3$ 로 40% 가량 상승했다. 울산의 철 오염도는 특히 지난 95년  $0.7443\mu\text{g}/\text{m}^3$ 에서 지난해  $1.2729\mu\text{g}/\text{m}^3$ 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역시  $0.0005\mu\text{g}/\text{m}^3$  안팎이던 카드뮴 오염치가 지난해에는  $0.0032\mu\text{g}/\text{m}^3$ 로 갑자기 높아졌고 구리, 철, 니켈 오염도도 다같이 상승했다.

이밖에 포항지역 대기의 중금속 오염도도 납, 망간 성분이 다소 줄어들었을 뿐 카드뮴, 크롬, 구리, 철 오염치는 계속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공업지역 가운데 대기 중금속 오염도가 가장 심한 곳은 반월 시화공단을 끼고 있는 안산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지역 납 오염도는 모두 지난 94년과 95년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는 저유황유 등 질나쁜 연료 사용을 줄임에 따른 납오염 저감 효과는 나타나고 있으나 나머지 중금속 오염 방지에 소홀한 때문으로 환경부는 분석했다.

한편 주요 공업지역 가운데 대기 중금속 오염도가 가장 심한 곳은 반월, 시화공단을 끼고 있는 안산시로 나타났다.

## 올해 황사먼지 중금속 오염 낮아졌다

올해 황사 먼지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이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4월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황사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한 결과 납, 카드뮴, 크롬, 철, 구리, 니켈 등 6개 중금속 성분이 지난해 황사때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대전지역에서 측정된 황사 먼지의 납 함유량은  $0.027\mu\text{g}/\text{m}^3$ 로 지난해 황사 때 평균 농도  $0.079\mu\text{g}/\text{m}^3$ 보다 한결 낮았으며 철 농도도  $0.321\mu\text{g}/\text{m}^3$ 에 불과해 지난해 황

사 평균  $1.963\mu\text{g}/\text{m}^3$ 에 비해 8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부산지역 황사 남 함유량 역시 올해는  $0.024\mu\text{g}/\text{m}^3$ 에 불과해 지난해  $0.08\mu\text{g}/\text{m}^3$ 보다 크게 낮았으며 니켈 함유량도 지난해  $0.014\mu\text{g}/\text{m}^3$ 에서 올해는  $0.006\mu\text{g}/\text{m}^3$ 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처럼 황사 먼지 중금속 농도가 크게 떨어진 것은 황사가 갑자기 발생해 소멸한 때문에 중금속 농도 측정이 필요한 시간이 불충분한 것과 주로 돌풍에 의해 발생, 대기중 중금속 성분이 녹아들기가 어려운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황사 현상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면 중국 등 내륙지방 공업지역에서 배출된 중금속이 먼지와 결합해 농도가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황사 먼지의 중금속 농도 측정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 지난해 방지지설 공사액 1조5천억원

환경부는 4월 12일 작년 환경오염방지지설업체 현황과 공사실적을 조사한 결과, 모두 7백69개 방지지설업체에서 모두 1조5천3백95억원 규모의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야별 공사실적은 수질분야가 9천1백6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기분야 5천4백74억원, 소음·진동분야 7백58억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해외 수주실적은 지난 94년 24건에 3백68억원,

95년 30건에 1천73억원 지난해 49건에 3천7백10억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별 도급순위는 삼성엔지니어링이 1천2백93억원으로 선두를 달렸고 ▲ 포스코개발 8백86억원 ▲ LG엔지니어링 6백34억원 ▲ 화성산업 5백23억원 ▲ 삼성건설 4백89억원 ▲ 현대정공 3백29억원 ▲ 대림산업 2백33억원 등이었다.

환경부는 앞으로 방지지설업 등록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도급공사 및 하도급공사의 수주실적을 분리, 보고도록해 보다 정확한 공사실적을 산출하고 환경산업육성 계획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경제 살리기 심정 계획 마련

올 하반기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실천업소는 '환경친화식당'으로 지정돼 수도료 감면 및 위생단속 경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현재 불황에 신음하는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 살리기 실천계획'을 4월 13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을 늘리기 위해 내무부 등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지하철역 주변에 환승주차장을 확대 설치키로 했다.

또 '수돗물 아껴쓰기'를 생활화하기 위해 물사용량이 많은 대형 건물에 중수도 설치를 권장하고 중수도 설치사업장에는 수도료를 경감해 줄 계획이다.

백화점·슈퍼마켓 등에서 재생종이 봉투 사용을 권장하고 목욕탕·사우나 등에서도 개인별 세면도구함 설치를 권고해 1회용 폐기물 발생을 억제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올 하반기부터 정부가 수주하는 공사에는 일정비율 이상의 폐콘크리트·철근 등 폐건설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업체 및 주요 민간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실효성 없는 환경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상경비 등 소모성 경비를 줄이는 한편 환경관련 행사를 간소화하고 에너지·물자를 절약하는 등 모두 67억1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방침이다.

이밖에 저축률 제고를 위해 소속 및 산하기관 전직원이 1개 이상 예금이나 적금통장에 가입토록 권장하고 우수저축 직원에 대해 포상할 계획이다.



◆ 지난해에는 7백69개 방지지설업체에서 모두 1조5천3백95억원 규모의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

정부는 오는 2001년까지 대기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수질환경기준을 현재 14개 항목에서 28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4월 15일 고건 총리 주재로 강경식 부총리 겸 재계위원 장관, 강현욱 환경부 장관 등 12개 부처 장관과 이세중 환경운동연합 대표, 정광모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회장 등 민간위촉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보전위원회회의를 열고 제2차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올해부터 2001년까지 5년 동안 시행하는 이번 제2차 환경개선종합계획은 1백31개의 투자 및 시책 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부는 이 기간중 모두 32조원의 투자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종합계획 설명에서 강경식 환경부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으로 우리나라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대기 중 아황산가스, 총먼지,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현재보다 크게 강화해 연차적으로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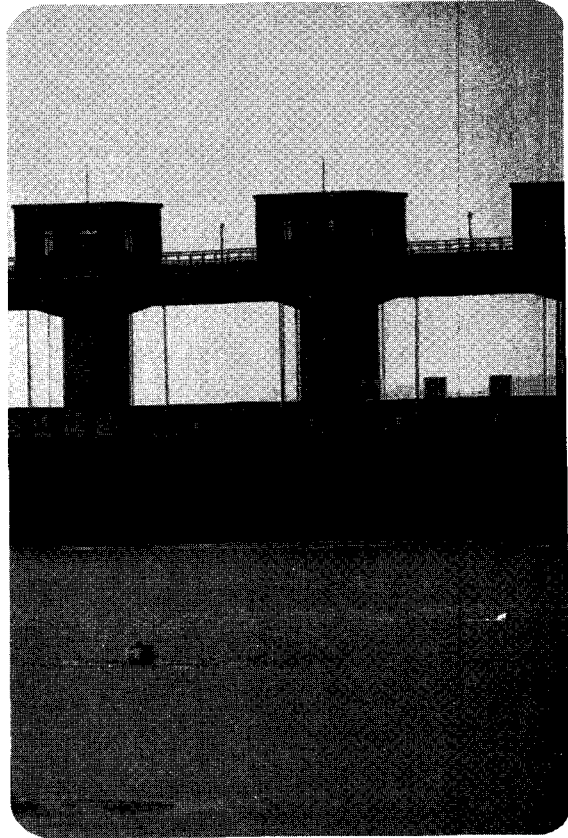
정부는 특히 대기공해가 주로 자동차 운행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고 경유의 황함량을 현재 0.1%이하에서 내년부터 0.05%로 강화하고 휘발유에 포함된 벤젠 함량 기준도 5%에서 4%로 내리기로 했다.

또 혼잡통행로 정수지역을 확대하고 도심비 주차료 인상, 환경친화적 주행세 도입 등을 통해 자동차 보유에 따른 비용은 내리더라도 운행에 필요한 비용은 높이는 방향으로 각종 정책을 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수원 등 수질 개선을 위해 현재 45%에 불과한 하수처리율을 65%로 높이고 지역별로 배출기준을 따로 정해 오염물질에 대한 총량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음용수 수질기준 항목도 현행 45개에서 85개로 늘리는 한편 16개 정수장에 내년까지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갖춰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이같은 환경개선중기계획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관리능력을 지금보



정부는 상수원 등 수질 개선을 위해 현재 45%에 불과한 하수처리율을 65%로 높이고 지역별로 배출기준을 따로 정해 오염물질에 대한 총량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다 한걸 높여야 한다고 보고 환경정책개발과 국제관계 업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이양하고 지역환경계획 모델의 개발과 환경보전시범도시 사업의 활성화 등을 지원해 지방자치단체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심 역할을 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앙정부가 맡고 있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로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하천 유역별로 자치단체간 협의체 구성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환경개선사업에 올해부터 2001년까지 5년간 공공부문 22조원, 민자유치 10조원 등 32조원의 재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분야별로는 대기보전에 10조원, 수질보전에 13조원, 상수도 관리에 3조원, 폐기물 관리에 5조원 등을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